

2025년 6월 21일 시행 지방직9급 공무원임용시험 ‘행정학개론’ 해설 (염오봉 교수)

[총평]

이번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은 작년도 2024년 출제문제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공공가치관리론과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문제는 어렵게 출제된 문제로서 수험생들에게 당혹감을 주었을 것이다.

행정학은 실용학문이므로 정부가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고 법령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출제한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제샌드박스,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제는 관련 법률을 최근 수년 내에 새로 제정, 개정되어 시행된 제도이므로 매우 시사성이 높은 문제들이다.

수험생들이 정부 현장의 이슈를 예의 주시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에 대비하여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출제문제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평균적 수준의 난이도로 평가되므로 꾸준히 세밀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90점 이상 고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정학 출제문제의 상당수 문제들은 필자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공탈출 행정학에서 제공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 적중되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탈출 행정학을 적극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드린다.

1.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 ㄴ. 사람보다는 일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다.
- ㄷ.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보수체계 확립이 장점이다.
- ㄹ.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③

[해설]

직위분류제는 직무(job)와 직위(position)을 기준으로 조직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편제하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는 세밀하고 정확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직급을 정하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직무와 직위를 변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ㄱ. 인사의 탄력성과 융통성이 높다. 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직위분류제는 모든 계층의 직무에 담당할 자를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자유로이 충원하므로 개방형 임용제를 기본으로 채택한다. 따라서 신분보장이 약화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어렵다.

따라서 ㄴ.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다.는 지문은 틀렸다.

2.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과목과 구조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 ① 명료성의 원칙
- ② 완전성의 원칙
- ③ 공개성의 원칙
- ④ 한정성의 원칙

[정답] ①

[해설]

명료성의 원칙은 clarity rule 로서 예산 공개의 전제원칙이다.

예산의 구조와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하고 수입과 지출이 합리적으로 분류되며, 수입 및 지출의 추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 ③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④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인사혁신처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에 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의 공직 진출 및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대상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다.

2023년에는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다.

「제2차 통합(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1) 양성평등 2) 장애인 3) 지역인재 4) 이공계전공자 등 4개 분야별로 균형인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②[X]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2003년,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2005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2007년

순으로 도입하였다.

4. 하우스(House)의 경로 - 목표모형에서 부하들의 욕구를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리더십은?

- ① 지시적(directive) 리더십
- ②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 ③ 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
- ④ 성취 지향적(achievement - oriented) 리더십

[정답] ③

[해설]

하우스(House)의 경로 - 목표모형은

리더의 행동 형태가 상황변수와 상호작용하고 이에 대해 부하가 어떻게 지각(cognition)하는지에 따라 부하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리더의 행동 형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유형화했다.

- ① 지시적(directive) 리더십
- ②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
- ③ 참여적(participative) 리더십
- ④ 성취 지향적(achievement - oriented) 리더십

상황변수로는 부하의 특성(능력, 성격 등)과 근무환경의 특성(과업의 구조화 정도 등)을 선정했다.

과업의 구조화가 잘 된...단순한 업무 구조 상황에서는 부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므로 리더가 부하를 지원하고 배려하며 복지를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후원적(supportive)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5.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은 내부적 필요에 의해 조직단위와 기능을 분산적으로 설계한다.
- ② 네트워크 조직은 수직적 계층의 수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구조로 환경적 변화에 적응성이 높다.
- ③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적 조직의 역할과 프로젝트팀의 구조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 ④ 팀제는 수평적 구조와 자율적 권한부여로 구성원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리하다.

[정답] ①

[해설]

전통적 관료제 조직은 공급자 중심의 분할적.분산적 구조로 편제된다.

이에 반해 Linden의 이음매 없는 조직(seamless organization)은 분할적.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총체적. 유기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것은 기능별. 조직단위별로 조각조각난 업무를 재결합시켜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그리고 힘 안 들이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이음매 없는 조직은 프로세스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프로세스(process)란 하나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업무흐름(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프로세스는 업무과정 절차를 기본 단위로 설계되므로 분권화는 높고 계층화는 낮아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가치는?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 개념으로 민주이념 실현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 및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롤스(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이론적 근거이다.

- ① 평등성 ② 형평성
- ③ 민주성 ④ 능률성

[정답] ②

[해설]

형평성 equity 은 공정 fair 과 정의 justice 를 말한다.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신행정학이 주창한 행정이념이다.

7.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법과 상향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를 중시한다.
- ②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주목한다.
- ③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긴밀한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 ④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결과와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한다.

[정답] ④

[해설]

④[X] 정책결과와 집행의 엄격한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법이다.

8.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가치관리론에서 보즈만(Bozeman)은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다.
- ②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장에 의한 방향잡기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 ③ 뉴거버넌스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상호신뢰 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①

[해설]

①[X] 공공가치관리론에서 정당성과 지지, 공공가치, 운영역량으로 구성된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보즈만(Bozeman)이 아니라 마크 무어(Mark H. Moore)이다.

*** 상세한 해설....**

공공가치관리론에 관한 문제는 2024년 6월 22일에 시행된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다.

이 때의 공공가치관리론 기출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을 고르는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

이 기출문제와 해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기출문제]

2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이 문제가 이번 2024년 9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진다. 물론 공공가치론에 대한 문제가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공공가치론의 세부 내용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이 문제의 출제자는 수험생들에게 이제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접어치우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행정학 책에서 공공가치론은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고 소개한다. 왜 공공가치론이 신공공관리론의 대안이 될까? 그리고 왜 시험에 자주 출제될까? 한마디로 미국 행정학계 주요 흐름에서 볼 때 공공가치론은 이단아(돌연변이)다.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행정학계에서 철학적 용어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자는 주장은 매우

낮설다.

‘가치(value)’란 형이상학적 대상이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의 영역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가치는 과학(science)이 아니라 기술(art)의 세계에 존재한다. 그래서 공공가치론은 그 태생부터가 경영학의 영향을 받았고, 주창자인 무어와 보제만이 미국 학자들이지만 그 반향은 영국 등 유럽에서 터져 나왔다. 공공가치론에 대해 미국은 20년간 침묵했고 여전히 냉정한 상태이다.

공공가치론? 우선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도데체 ‘공공 public + 가치 value’가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 이론이 된다는 것인가? 공공가치론의 핵심 주장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전통적 이분법이나 도덕적(윤리적, ethical) 관점을 비판하고 융합적(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월슨 패러다임은 공공(public)을 관리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의 관점에 경도되어 접근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은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이분법에 빠져들었다. 이들에게 공공은 악(비효율)이고 경영은 선(효율)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에 올라타 등장했던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시장적 기구로 탈바꿈하려는 급진적 개혁을 주도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없고 오직 시장만이 존재한다. 사실 현재까지도 월슨패러다임의 현대판이라 할 신공공관리론이 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월슨패러다임이든 신공관리론이든 행정이 경영학의 아류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족쇄를 스스로 얹어매는 한계에 직면한다. 그래서 미국 행정학계에서 -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거부감은 매우 강하다. 또 한편 행정학의 주류적 패러다임은 공공(public)을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이다. 공공성이 효율성과 상반되는 행정이념의 하나로 구분하는 관점이 이를 보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관료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시민들에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공공에 대한 윤리적 관점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공공선택론의 공격을 받아 휘청거렸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동일하게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자인 Homo Economicus(경제적 인간)이라는 폭로가 결정타였다. 그만큼 미국 행정학계에서 공공에 대한 윤리적 접근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공공가치론은 바로 이러한 공사행정 이분법이나 공공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모두 비판하고 넘어서려 시도한다.

즉 공공의 가치는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모든 영역에 폭넓게 존재하며 단지 그 강도만 다른 뿐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간조직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분론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관료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관리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공공서비스는 단순히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단기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고 시민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서 그런 공공서비스가 존재의 가치 즉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그런 공공서비스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운영역량을 획득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전략은 윤리적 필요성보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의 협치 개념에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가치론을 처음 주창한 마크 무어(Mark H. Moore)는 미국의 하바드대학의 케네디행정대학원(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교수인데, 1994년 '전략 초점으로서의 공공가치(Public Value as the Focus of Strategy)'라는 논문에서 행정학 분야에서는 처음 '공공가치(public value)'를 소개했다. 그는 경영대학원의 다양한 연구논문들 특히 마케팅 분야 논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BSC(Balanced Score Card)의 영향을 받았다.

마크 무어가 관심을 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건 정부이건 모두 공공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 이런 점에서 보제만의 공공가치의 상대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 이런 공공성을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 내어 현장에 실현하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것이 바로 전략(strategy)의 문제이다.

이 얼마나 경영학적 관심사들이 아닌가?

그래서 무어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공공가치 회계(public value accounting)'이다.

마크 무어는 처음 공공가치를 소개한 후 10년이 더 지난 2014년 '공공가치 회계(Public Value Accounting)'란 논문을 발표했다.

회계는 계속하는 조직이 얼마의 자원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영역에서 얼마큼 조달해 투입하여 자산(공공영역에서는 '공공가치')을 증감시켰는지를 분석 정리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공공가치 회계는 공공가치를 만들어 실현하는 데 얼마의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투입을 통해서 얼마큼의 공공가치를 창출해내었으며 그것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등등.. 이런 것을 계량화하여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장부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러면 공공가치론이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고자 했던 요소는 무엇일까?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에게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시장원리에 따라 최상의 공급을 하는 서비스공급자(serving)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시대 상황은 변화했다.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어서 정부는 조직과 자원을 쥐어짜는(squeezing) 관리전략을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관료는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전략적 관리자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 집단에서 공동의 이익이 되는 가치(공공가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마크 무어는 전략적 관리자가 공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해 시민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할 수 있어서 운영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마크 무어는 바로 이런 관계를 ‘전략적 삼각형’ 모델로 제시했는데 그 3개의 요소는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이러한 무어의 노력은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미국 행정학계의 소명에 한층 다가서려는 시도였다.

미국 주류행정학계는 인력, 예산, 조직에 대한 효율적 관리 기법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해오고 있다. 이들에게 공공서비스가 고객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평가되는지의 전략에 대한 연구는 낯설다. 이것은 경영학계의 마케팅 연구 주제이다. 마크 무어는 공공부문에 마케팅 전략의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대학 교수인 보즈만(Bozeman)은 행정학에서 공익과 사익의 경계선이 없다는 말로 유명하다. 그만큼 보즈만은 정부와 민간기업 등 모든 조직은 공공가치를 그 정도가 다를 뿐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로 공공가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왜냐하면 민간부문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공공가치 실현이 필요한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 공공가치의 실패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대체 정부와 기업들이 실현해야 할 공공가치의 목록과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모든 조직이 지향해야 할 공공가치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러한 가치가 얼마큼 실현되지 못하였는지...‘공공가치 실패’라고 부른다...를 측정하도록 안내하는 지도인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무어와 보제만의 공공가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국 행정학계에서 비주류 위치에 있지만 그 도전적 대안의식은 주목받고 있다. 마크 무어가 공공가치론 연구논문을 오스트레일리아 학술지에 게재했고, 보제만이 유럽 학자와 함께 공공가치론을 연구해 발표한 이유는 바로 미국행정학계의 거부감에 연유한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대안적 연구로서 공공가치론의 가치는 매우 크다.

기출문제 지문의 틀린 부분을 바로잡으면 아래와 같다.

ㄱ.[X]보즈만(Bozeman)은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을 제안한다.

ㄴ.[X]무어(Moore)는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O]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정부의 성과를 공공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전략적 관리하려는 공공가치관리에서 중요한 차원은 세 가지이며, Moore(1995)는 이를 ‘전략적 삼각형(the strategic triangle)’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삼각형의 각 꼭짓점은 조직의 공공가치(public value) 정의, 정당성과 지지(legitimacy and support)의 확보, 운영 역량(operational capability)의 구축이며 세 점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조정을 위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

ㄹ.[O]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이것은 보제만의 주장이다.

9.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② 혼합탐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교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에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앨리슨모형 중 조직과정모형(Model II)에 따르면 정부는 하위

조직들의 집합체이며,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①

[해설]

①[X]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을 제시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을 다소 변형시켜 현실에 입각한 분석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의사결정기회, 참여자이다.

이에 반해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서 정책과정의 3가지 흐름은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다.

이 2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10. 지방자치법 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주민소환제도
-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 ③ 주민발안제도
- ④ 주민소송제도

[정답] ③

[해설]

보기의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에서 2000년부터 주민조례발안제를 시행해왔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조례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의회의 무관심과 비협조 현상도 발생했다.

특히 단체장에게 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독립적인 발의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2022년에 새로 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변경되어 새로 도입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선거권 연령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 참여를 촉진하고 인구규모별로 서명 조건을 완화.세분화 하여 주민 직접참여의 길을 확대하였다.

2) 그간 단체장을 경유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청구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3)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게 국가 및 지자체가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4)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 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결과 등 조치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대표가 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서명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12.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③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 ④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④

[해설]

- ①[X]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X]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③[X]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 ④[O]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이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1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융분야와 산업 분야에 모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종류

1. 신속확인 : 규제존재 여부, 내용문의
2. 임시허가 : 법령모호·불합리 시 - 기존규제 적용없이 우선 출시 후 규정개정
3. 실증특례 : 법령모호·불합리, 금지 시 - 기존규제 적용없이 시험·검증 허용

규제 샌드박스의 안전장치

생명 · 안전 검토, 문제 즉시대응, 배상책임 강화

1.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우려 시 규제 특례 제한
2.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특례 취소
3.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 사업자)

13.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 · 조정 ·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 ③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은 갖지만 집행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 ④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X]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집행권한을 모두 갖는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위원회 등의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결위원회는 의결권만 있고 집행권은 없다.

예) 징계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311)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입법례]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또한,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와 같이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와
- 2)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의, 자문,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뿐 의결에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위원회(합의제 조직)의 유형

1) 자문위원회

개인 또는 조직전체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당국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미흡하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의해 설치된다.

2) 조정위원회

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건의(자문) 성질만을 띠는 것도 있고, 법적 구속력(의결권)이 있는 경우도 있다.(ex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행정위원회(관청적 위원회,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

어느 정도 중립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사무기구와 상임위원을 둔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도 넓게 보면 이에 속하며 i)일선행정에 대한 규제기능 ii)준입법기능 iii)준사법기능 iv)정책·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한다.

4) 독립규제위원회

19세기 말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야기된 경제 및 사회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권·준사법권을 가지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회의식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의 전형적 형태로서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가 그 시초)이다.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란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지니면서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합의제 형태의 행정기관'이라는 의미이다.

14.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추정된 인과관계를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 ②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추상적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의미한다.
-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은 표본자료의 통계적 검증에서 도출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의미한다.
- ④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에 대한 논의는 우선 외적 타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X] 내적타당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에 제3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타당성을 말한다.

외적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을 통해 확인된 인과관계를 다른 대상에도 확대 적용하는 일반화의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내적타당성이 외적타당성에 우선하며 전자가 확보되어야 후자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15.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 ②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X]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이다.

②[O]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 헌법 제54조에서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X]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X]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16. 베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규제적 도구
- ② 종교적 도구
- ③ 경제적 도구
- ④ 정보적 도구

[정답] ②

[해설]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은 정부가 사회 변화를 유도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 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수단(means), 또는 기법의 총체(set of techniques)를
말한다.

비딩(Vedung)은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해 정책수단을 규제, 유인, 정보제공으로 유형
화하였다.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경제적(유인적) 도구(carrots), 정
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이에 반해 살라몬(Salamon)은

정책수단이 제공하는 산출물(행정활동 :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보호와 금지, 재정지원과 재정부담 등)과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전달 체계 :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를 기준으로 13개의 정책 도구를 제시하였다.

17.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 ②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 ③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 ④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④[X] 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가

- 1) 특정한 사업을 운영
- 2)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용
- 3)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연계 충당하여 회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1)번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사례는

1) 정부기업예산법 에 의거한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우체국 보험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하시라), 조달 사업 및 양곡관리 사업 등의 특별회계

2)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유형이 있다.

18.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②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③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④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답] ④

[해설]

④[X] 능률성(efficiency)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비용과 편익이 대상집단에게 배분되는 상태의 기준은 형평성(equity)이다.

19. 우리나라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③ 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④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경력직공무원이다.

[정답] ①

[해설]

①[O] 임용주체와 경비부담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누며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에는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된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2항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지방의회
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X]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③[X]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특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이다.

④[X]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이다.

20.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③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데이터기반 행정은 데이터 분석에 따라야 한다.

정책결정자의 경험, 직관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양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7.]**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①[O]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O]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활용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④[O]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

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4.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자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